

끝나지 않은 전쟁, 종군위안부 문제

진정한 보상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로부터

“일 본 정부는 정신대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 배상하라!” 가 낄 뜬 몸에 악에 받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둘러싸인 전쟁들 사이를 뚫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메아리쳤다. 8월 11일 오후 12시 30분,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는 4일 종군 위안부 모집에 대한 일본의 2차 발표에 대한 규탄 시위를 가졌다. 그간 정신대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던 정대협의 노력은 일본의 강제성 일부 시인, 배상에 대한 언급 회피 등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반일감정 막기 위한 위안소

일본은 91년 12월부터 시작된 실태 조사 결과를 92년 7월 1차 발표에 이어 4일 “점령지내 일본군의 강간 사건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과 성병으로 인한 전력저하 방지, 방첩 등의 이유로 32년 상해사변 발발당시 군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가 알선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기가막힌 이유는 눈감아 준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발표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진상조사, 보상문제에 대한 회피, 전쟁범죄를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의 부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쟁이 끝난지 48년이 지났건만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및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보상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발표에 대해 정대협은 ‘강제종군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 운영 등에 관한 일본군의 조직적인 명령체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핵심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위안부 수송과 위안소 운영과정에서 일본군이 저질렀던 비인도적 만행에 대해서도 이번 보고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한다.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도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군대위안부 피해사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 군인, 군속 등 일제의 또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는 물론 피해배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유엔 등 전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낱알이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89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된 정신대 문제는 햇수로 5년만에 일본이 부분적

인 강제동원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논란과 무관하게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쟁세대인 미야자와 정권이 권력을 상실함으로써 역사왜곡세대인 전후세대로 책임이 넘겨지면서 흐지부지하게 종군위안부 문제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한국 정부의 일본의 발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정신대 거론은 더이상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정신대 문제는 민간차원의 소송제기와 국제적 인권의 문제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정부 입장 지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전 일본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에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임전의 약속은 운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전쟁범죄국인 일본의 사죄도, 어떠한 형태로의 보상도 없는 이번의 발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노정권시절, 일본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상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발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을 그대로 수용, 과거 군사정권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정권 시절 보상의 자국

써 진보주의자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은 남한 자본주의가 전격적인 환경보호 추진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남한 자본주의는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 합리성을 수용할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인식하였다. 현재의 GNP개념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는 실제적으로는 국민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나 GNP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해 산업이 저공해 산업에 비해 단기적으로 GNP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클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의 증가는 자연 환경의 파괴와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결과에만 의존하여 환경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외부 효과로만 인식하였다. 생산 현장에서의 기업가들의 생각이 이러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방지시설이나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버리는 한심한 모습과 이를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행정기관들의 관행은 이러한 그릇된 인식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됨으로써 이러한 낡은 관행과 인식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세계 150여 개국 정상 및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엔 환경개발 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ESSD(환경적으로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를 원칙으로 하는 「리우선언」과 그 행동강령을 밝힌 「의제 21」이 채택되었다.

환경보호주의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남한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산업구조 조정에 착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나아가게 될 계기가 될런지의 여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이것은 여전히 환경문제의 해결이 국가간의 힘의 관계와 국내 주체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과 후진국, 자본가와 민중의 역학관계에 의해 문제 해결의 속도와 폭이

**선 성장 후 보전의
신경제 정책은
반환경적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진보적 환경운동의 질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환경운동은 새로운 선택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무조건 선이거나 진보진영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소박한 생각은 이제 깨고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에도 당파성이 있으며 무당파적 환경운동은 오히려 자본의 지배를 유리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환경운동도 전문성과 대중성 못지않게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모든 운동은 그 기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상, 하부의 원만한 연결과

그것을 위한 완충조직의 활동이 원활해야만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 완충조직으로 인해 비로소 민중운동은 중층화된 피라미트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신사회 운동조직이 진보운동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다

시민단체의 무당파화 직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광범위한 일반시민층과의 결합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온건한 사상지향,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전력한 결과 많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정치조직의 무능력과 내부 주체의 단일함으로 인해 실제적 전략 지향적인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미래 새로운 민중권력의 창출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진보정치조직들은 고립되어 분산되고 시민 운동조직들도 생명력을 잃어 관성적인 압력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과거의 운동 성과를 간직하고 있는 기존 정치조직은 이들 시민 단체들에 대해 유연한 입장과 실제적 지도를 견지해야 하며 시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활동가들은 부문운동의 특성상 탈정치화, 무당파화 될 가능성을 직시하여 자칫 청산주의로 흐르기 쉬운 조직지도 이념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민중해방의 동반자가 되어 민중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중성과 조직의 양적 측면에 주목할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내부의 사상정립과 조직적 조망이라는 질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필]**

내 처리원칙은 기획원과 건설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는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본이 치뤄야할 보상을 대신 치루자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금번 발표를 통하여 군대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전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또한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는 등의 결의를 표명한 점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고 하며 신정부의 후속조치를 주의 깊게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눈썹고 찾으려 해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이 무슨 사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자위대의 파견과 증설이라는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상임이사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형식적 발표라는 해석이 더 수궁이 갈 뿐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사과와 반성’,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논평을 갖자 이에 뒤질세라 사실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일들이 한치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은 현대적 외교의 길이 아니다. 국제화의 질박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을 매개로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수치스러운 과거의 장을 닫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선일보의 사실은 진정 수치스러운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삼스러운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정신대로 일본군에 짓밟힌 우리

동포를 말이라는 무기로 다시 폭행하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지난해 김대중 칼럼을 통해 조선일보는 「정신대와 돈」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보상아닌 사죄가 마땅하다고 밝혀 보상과 사죄가 다른 사안인 듯 호도하고 있다.

굴욕적 외교 산물 한일협정

이러한 정부와 조선일보 등 보수세력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다. 협정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청구권문제에 경제협력을 결부시켜 보상문제를 일괄타결했다. 이 협정에는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을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를 제공하고 한일 청구권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일보 92.4.26). 이를 근거로 일본은 남북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선택적인 보상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난날의 굴욕적인 외교행태가 오늘의 굴욕을 낳고 현재의 굴욕은 또다시 미래의 굴욕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 선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전범 처리의 예는 우리에게 커다란 모범

으로 보여진다. 전범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시기와 무관하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상을 통해 또다른 전쟁의 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한일 협정당시에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타국의 예와 현재의 조건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 철저한 조사·보상 요구

같은 피해국인 북한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현격하게 다른 입장을 표명하여 주목된다. 일본과 수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북한은 이번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때에만 정상적인 국교 수립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일 수교에서



8월 12일 정대협과 여성단체연합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만행의 진상규명과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우위적인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은 굴욕적 외교를 구걸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해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지역에서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노리개로 전략한 중군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동아일보 92.5.17). 이는 남과 북에 선별적으로 사죄와 보상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표가 문제 해결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밝히고 “중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진상조사, 공개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명, 이들의 형사처벌, 명백한 사죄·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 발표내용중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대상,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 어느 한 대상과만 어물쩍해 넘기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한 국정부가 일본의 발표를 중군위안부 문제의 일단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8일 ‘저주받을 민족 반역행위’라며 격렬히 비난, 이 문제가 한일간의 양해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을 볼모로 한 마무리

2차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정대협은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강제성에 대한 수궁이 있을시 이를 마무리지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2차발표 직후 정부측에 논평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적 납득속에서 국민이 이 발표를 받아들인다면 정부에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발표직후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1.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하고 정부내 예산과 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2.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되는 것을 반대할 것, 3.정부 차원의 배상요구반대정책을 취소하고 민간차원의 개인적 배상요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에 보내는 질의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다른 피해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남한 정부가 이를 환영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요구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정대

있음에 다른 아니다. 또한 도덕적 우위는 철저한 자국민의 보호책무를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강창일 교수의 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한겨레 8.6).

정대협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군, 관, 민이 공동으로 위안부 강제모집에 나선 명백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관여해 감언,강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다는 식으로 위안부 강제연행의 책임을 교묘하게 민간업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다.

**중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전면적인 진상조사,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 형사처벌,
명백한 사죄 보상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 운신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상이 돈 몇푼을 받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피해자가 얼마인지 이를 지시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고 이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위해 사죄와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구요.” 정대협의 임정덕 간사는 이같이 밝히고 물질적 보상, 정신적 명예회복, 역사교육을 철저히하는 것이 모두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의 도덕적 우위 주장은 보상을 돈문제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되고

전쟁피해국 민간단체 연대

정대협은 이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전쟁피해국 민간단체들과 연대해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강제중군위안부 문제가 상정돼 유엔 차원의 공식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이들 단체와 함께 유엔가입국 정부와 민간단체를 상대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일본대사 나와서 들어라. 국민학교 5년 공부하는 학생을 잡아다 강간하고 고문을 하였다. 꽃다운 나이의 많은 여성들을 잡초처럼 짓밟고 차들처럼 차버렸다.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쪽바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신미자 할머니의 모습에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 회복, 자국민의 힘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추구가 우선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자각하게 한다. [전]

박세진 / 본지기자